"제주를 담다
미래를 읽다"
제주의 대표 신문 한라일보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821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3년 3월 14일 화요일(음력 2월 23일)

추자 해상풍력 수익금 '공방'

전라남도 "주민수용성 차원서 개발이익 나눠야"
제주도 "제주해역서 사업… 인센티브 배분 불가"
산업통상자원부 이번주 회의… 양측 입장 조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부여 결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에서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 배분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부여 결정을 앞두고 제주자치도와 전라남도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해역(추자)에서 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허가와 감독은 제주지사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304조에 풍력자원은 제주의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인·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에 제출하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전라남도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송전선로와 케이블, 변전소 등이 전남에 설치되는 만큼 주민 수용성 확보 차원에서 수익금 배분(지분 참여)을 요청했다. 제주도가 허가권을 갖게 되면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으로 당기순이익의 17.5%를 받게 되는데, 이 공유화 기금 일부를 나눠 달라는 것이다.

이같은 전남의 인센티브 배분 요구에 제주자치도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주)과 국내 특수목적법인 등 2개 기업이 추자도 동·서쪽 해역에 각 1500㎿씩 총 30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가기본도에는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 풍황계측기설치 지역과 사업 대상 구역이 제주도와 전라남도에 걸쳐 있다. 사업구역이 제주해역이면 제주도가 허가권을 갖지만 전라남도 해역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권을 갖는다. 이에 산자부는 내부적으로 제주도에 허가권이 있다고 판단을 했으나 최근 전남에서 공유화 기금 배분을 요구하면서 발전사업 인·허가권 부여 결정이 표류하고 있다.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주) 관계자는 "현재 산자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산업부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산자부에서 1·2차 회의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초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요청해 우리의 의견을 이미 전달한 상태"라며 "산자부에서 이번주에 다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오영훈 지사 등이 13일 제주시 건입동 소재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개관식 직후 전시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강희만기자

4·3 상징 '주정공장 옛터' 역사 현장으로

제주도 어제 주정공장 수용소서 4·3역사관 개관
최대 규모 민간인 수용소… 혹독한 고문 시달려

제주4·3 당시 도내 최대 규모 수용소로 4·3의 아픔을 간직한 주정공장 옛터가 4·3유족을 위한 치유의 공간이자 역사교육 현장으로 탈바꿈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제주시 건입동 소재 주정공장 옛터 일대에서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이 개관되는 건입동 940-13번지 일원은 1943년 일제가 설립한 동양척식주식회사 제주주정공장이 위치했던 곳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주정공장은 일제강점기 시절 도민을 수탈했던 장소였고, 해방 이후에는 도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산업시설로 활용됐으며, 공장 부속창고는 4·3당시 민간인 수용소로 쓰였다.

수용자들은 혹독한 고문과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사망하거나 일부는 석방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전국 각지 형무소로 이송됐으며 6·25전쟁 직후 행방불명됐다.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운영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4·3역사관에서는 4·3유적지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해설도 들을 수 있다.

오영훈 지사는 축사를 통해 "민선8기 제주도정은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다랑쉬굴 진혼공간 조성사업, 백조일손기념관 및 중문4·3기념관 건립사업 등 4·3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고 새롭게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노후 지하수 관정 내부 실태조사 확대

도, 지난해 서귀포 이어 올해 제주시 지역 조사

제주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한 노후 지하수 관정 내부 실태조사가 확대 실시된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2004년부터 타 지역보다 강화된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전에 설치된 지하수 관정은 상대적으로 시설 상태가 부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내부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관정의 내부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도는 지난해부터 노후 지하수 관정 표본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서귀포시 노후 지하수 관정 조사에 이어 올해는 제주시 지역 25개 관정으로 표본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사업 대상은 2000년 전후 양성화된 노후시설로 최근 5년간 수질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근접한 관정을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내용으로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한 내부 조사·진단, 내부 오염물질 제거 및 청소, 사업 전·후 수질검사, 수질·수량 개선 효과 분석 등이 이뤄지며, 지하수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에서 수행한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12일 서부지역 태풍급 강풍… 4면 / 삼매봉도서관 셔틀버스 폐지?… 5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제정 세미나

16일 한라컨벤션센터

제주특별자치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앞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유의 장을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제주 한라컨벤션센터 A홀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집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가 '제주 에너지 전환을 통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기조발제한다.

또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김영환 본부장이 '분산에너지 특구가 제주 에너지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강다혜기자